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복지국가 전략
발제자: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 시: 2017년 05월 18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제 255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05월 18일 정책세미나에서는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연사로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복지국가 전략'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1811년 무렵 제1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대중화되면서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산업혁명과 동시에 나폴레옹 전쟁이 진행되면서 경제 불황, 임금 하락, 고용 감소, 실업자 증가 등이 발생하였다. 기계와 기술 발달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이 고조되면서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켰다. 이후 교육혁명이 성공하면서 고(高)학력 고(高)기술 일자리가 대규모로 창출되었다. 신기술 제품이 대량생산되어 저(低)가로 시장에 풀리면서 소비자 복지도 증진되었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면서 제1차 산업혁명 초기 겪었던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기술발달이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인가, 잉여인간화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 낙관론자들은 점차 일자리 환경이 개선되고 과학기술을 저가로 대량 소비할 수 있기에 인류 복지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인해 잉여인간이 급증할 것이라 예측한다. 극소수 자본가와 기술 엘리트들만이 로봇 등의 기술을 소유할 것이며 이는 곧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 말한다. 고차원 최첨단 지식체계가 형성되면서 노동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고 전반적인 교육혁명조차 힘들 것으로 본다. 대체로 많은 국민들이 비관론자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자본에 의해 전개되는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은 극소수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제4차 산업혁명을 복지국가와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복지국가를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금 복지로 기본소득을 충족시키는 대신 경찰력을 강화하고 교정시설을 증대하는 방식이 있다. 양극화가 완화될 수는 있지만 사회갈등이 확산되고, 불신풍조가 만연하면서 반사회적 인간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비생산적 공공비용 확대로 이어지고 생산성을 저하시켜 국가는 곧 위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서비스 복지 중심의 노동보조형 발전이다.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여 선순환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차세대를 위한 창의교육과 기성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와 같은 과학기술 수혜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국가별로 다양한 복지국가모형이 있다.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 한국도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한된 예산을 어느 분야에 투자하느냐가?’ 관건이다. 복지 범위가 확대될수록 경제적 성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현금 복지가 아닌 사회서비스 복지를 강조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복지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험연구결과로 20세기형 소득보장 복지형태에서 21세기형 생활보장 복지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선 현금급여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교육·보건 복지에 대한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낙관과 비관

- 1811년 무렵 제1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대중화되면서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산업혁명과 동시에 나폴레옹 전쟁이 진행되면서 경제 불황, 임금 하락, 고용 감소, 실업자 증가 등이 발생하였다. 기계와 기술 발달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이 고조되면서 리다이트 운동을 일으켰다. 이후 교육혁명이 성공하면서 고(高)학력 고(高)기술 일자리가 대규모로 창출되었다. 신기술 제품이 대량생산되어 저(低)가로 시장에 풀리면서 소비자 복지도 증진되었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면서 제1차 산업혁명 초기 겪었던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기술발달이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인가, 잉여인간화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 낙관론자들은 점차 일자리 환경이 개선되고 과학기술을 저가로 대량 소비할 수 있기에 인류 복지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인해 잉여인간이 급증할 것이라 예측한다. 극소수 자본가와 기술 엘리트들만이 로봇 등의 기술을 소유할 것이며 이는 곧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고차원 최첨단 지식체계가 형성되면서 노동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교육혁명조차 힘들 것으로 본다. 대체로 많은 국민들이 비관론자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자본에 의해 전개되는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은 극소수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 1970년대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저서 『노동의 종말』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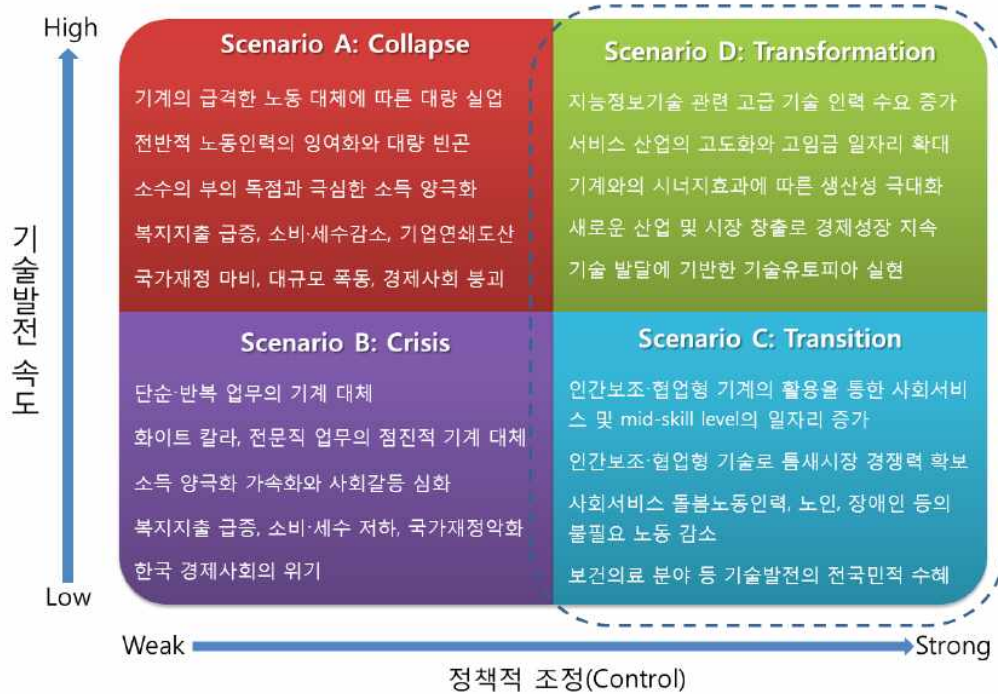
속화’에 대해 설파하였다. 노동력 없이 자본과 기술 투입만으로도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오늘날 제기되는 ‘일자리 디스토피아(Dystopia)’와 일맥상통한다. 첨단기술로 생산된 상품들을 향유하기 위해선 소비자의 구매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첨단 기술의 혜택은 소수에게만 귀착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본 소득이 없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을 위한 복지지출은 급증하는 동시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자 감소로 복지재원은 급감할 것이다. 소비자 감소로 기업수익이 악화되면 법인세 및 부유세도 감소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복지재정에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 복지국가를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금 복지로 기본소득을 충족시키는 대신 경찰력을 강화하고 교정시설을 증대하는 방식이 있다. 양극화가 완화될 수는 있지만 사회갈등이 확산되고, 불신풍조가 만연하면서 반사회적 인간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비생산적 공공비용 확대로 이어지고 생산성을 저하시켜 국가는 곧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서비스 복지 중심의 노동보조형 발전이다.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여 선순환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차세대를 위한 창의교육과 기성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와 같은 과학기술 수혜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그림1]과 같이 미래 경제사회 거시 전망 시나리오를 구성해보았을 때 전환(시나리오 C)과 변혁(시나리오 D)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발전 속도는 낮지만 정책적 조정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환(시나리오 C)으로 나아갈 경우 인간보조 및 협업형 기계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돌봄 노동인력을 확보한다면 보건의료기술 수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기술발전 속도가 높아지고 정책적 조정이 강해지는 변혁(시나리오 D)은 최상의 결과를 낳는다. 기술 유토피아가 실현되고 지능정보기술 관련 고급 기술 수요가 증가되어 고임금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

■ 한국형 고용복지 연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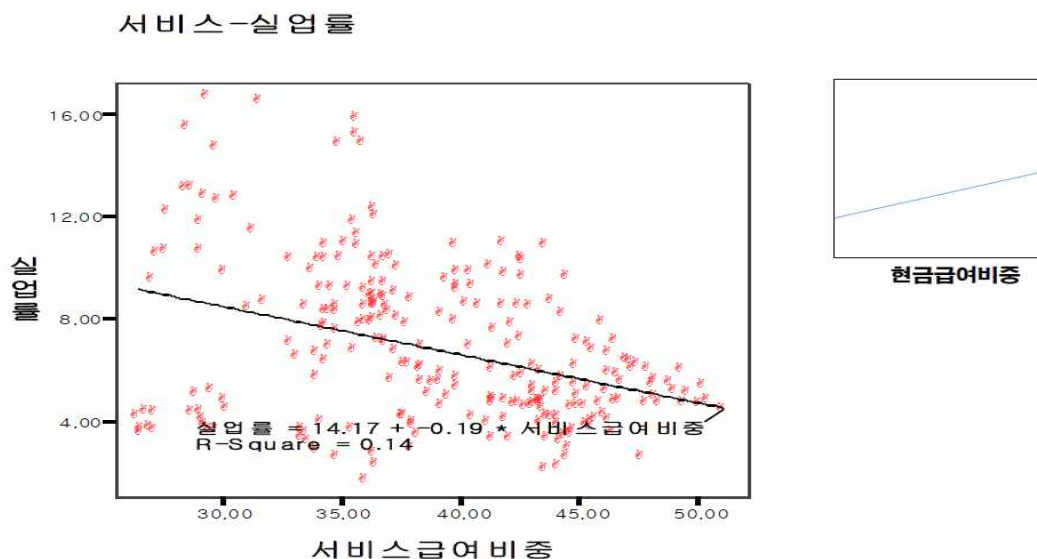
: 성장 친화적인 사회서비스 복지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 프랑스와 다수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그 중 프랑스는 현금 복지에 가장 많은 정부예산을 투자한 국가다. 스웨덴은 국민 수가 적어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현금 복지가 실행되고 있다. 국가별로 다양한 복지국가모형이 있다.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 한국도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한된 예산을 어느 분야에 투자하느냐?’ 관건이다. 복지 범위가 확대될수록 경제적 성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현금 복지가 아닌 사회서비스 복지를 강조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복지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험연구결과로 20세기형 소득보장 복지형태에서 21세기형 생활보장 복지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선 현금급여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교육·보건 복지에 대한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 [그림 2]는 서비스 급여 비중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서비스 복지를 늘릴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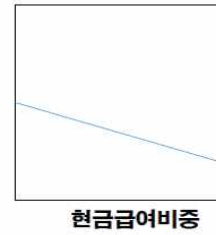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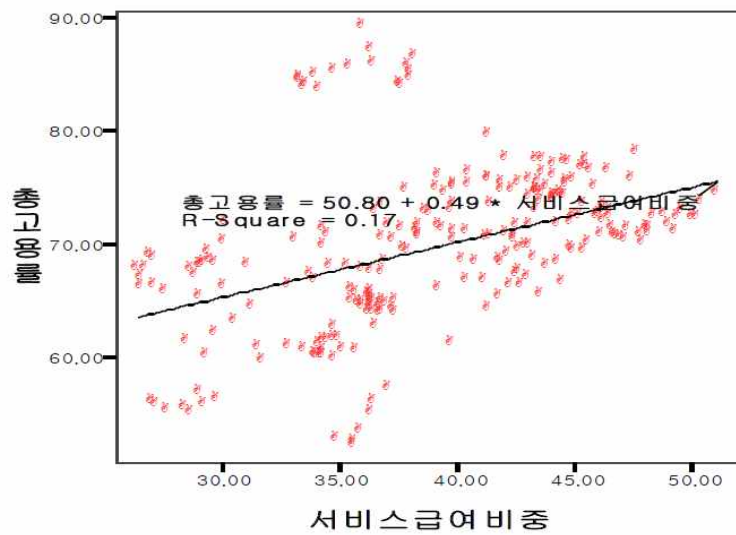
[그림 1] 미래 경제사회 거시전망 시나리오

실업률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마찬가지로 [그림 3]은 서비스 급여 비중과 총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서비스 복지가 확대될수록 총고용률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4]와 같이 서비스 급여 확대가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낳는다. 현금 복지가 결정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분위기를 낳는 복지병을 초래한다면 ‘사회서비스 복지’는 성장 친화적이므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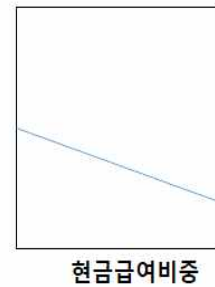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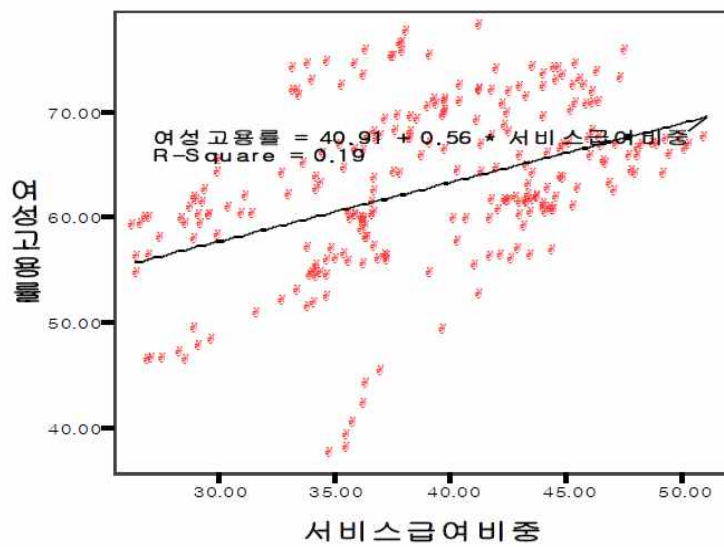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 급여 비중과 실업률의 상관관계

서비스-총고용률



[그림 3] 서비스 급여 비중과 총고용률의 상관관계

서비스-여성고용률



[그림 4] 서비스 급여 비중과 여성고용률의 상관관계

- 현금 복지는 선별적으로, 서비스 복지는 보편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복지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 특수지역연금개혁 등을 통해 공

적연금급여 재정을 안정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서비스 복지는 고용활성화를 원칙삼아 여성,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인적자원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 투자전략이 성장효과를 거두었다. 저소득여성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소득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국가 인적자원 투자전략이다. 더 나아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세계최대 사회적기업 삼할(Samhall)의 ‘장애인근로능력제’를 도입하여 장애인 노동시장을 보호해야 한다.

제 255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곧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과연 인공지능 기술이 그 ‘니즈(Needs)’를 충족해줄 수 있을까?

답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다. 제4차 산업혁명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어떻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지에 대한 해안을 찾지 못 하고 있다. 단순히 고용문제에 초점을 두고 복지국가 확대방안과 경제성장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강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산업안전 관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뛰어난 인체공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원천 기술을 한국이 따라잡을 수는 없다. 틈새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어가 고립된 언어이므로 통번역의 장벽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언어관련 산업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새로운 가치 창출과 실현, 그리고 국가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틈새전략이 필요하다.

질문2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가?

답변 기업이 직무편성 계획을 더 효율적으로 세워야 한다. 기업이 우선 110%로 채용을 하고 초과되는 10%에 대한 부담을 국가와 함께 나눠야 한다. 10% 인력은 잉여인력이 아니다. 육아 휴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나머지 근로자들이 막중한 업무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연초에 최소 1년 내에 해야 할 일을 조직한 후 인력에 맞추어 분담하는 체계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